

# 斷乎한 決意를 가져라

三塚 博<日本 自民黨 前政調會長>



“  
 原子력은  
 「기술에너지」라 해도  
 좋으며, 플루토늄 이용기술의  
 확립은 원자력이용의 궁극의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재처리 등의  
 핵연료사이클, 고속증식로의 조기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보의 제공, 진지한 연구개발,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얻는  
 지름길이다.

석유문제는 세계적으로 불투명하다. 에너지의 안전공급이 국가의 안정에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구환경면에서도 「클린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을 추진해야 한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파동 이후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추진하여 석유를 30% 삭감했다. 큰 줄기는 원자력이고, 앞으로도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갈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에너지의 쟁탈전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이 선진국에서 필요하다.

원자력은 「기술에너지」라 해도 좋으며, 플루토늄 이용기술의 확립은 원자력이용의 궁극의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재처리 등의 핵연료사이클, 고속증식로의 조기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25년에 걸쳐 국민합동으로 연구해 왔고, 「세계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충분한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보의 제공, 진지한 연구개발,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얻는 지름길이다.

폐기물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도 나온다. 영향이 적고, 안전하게 처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의 생존은 폐기물과의 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사성폐기물은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원자력정책의 당면과제로서 六個所村의 민간 재처리공장은 국가사업으로서 전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핵연료사이클시설의 원활한 추진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국제적인 연휴의 강화도 필요하며, 반원자력 운동도 국경을 넘고 있다. 사업자와 관계자에게 해내고자 하는 단호한 결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민당으로서는 정부,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 더 情報의 公開를

伊藤 茂 <日本 社會黨 政審會長>

사회당은 오랫동안 반원전, 탈원전을 주장해 왔다. 이번 대회에는 마음을 비우고 참가했다. 분명히 에너지와 원자력은 인류에게 있어서 문명사적인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이대로의 문명이 미래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다음을 위한 준비도 해 가야 한다. 지금 산업, 환경, 에너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 사회당대회에서는 원자력발전이 현재 30% 정도의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전제에 섰다. 그리고 먼저 원전을 축소하여 장래에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그 이유로서는 사고, 방사능, 안전성, 방사성폐기물처리, 핵연료사이클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또 피폭국으로서의 특별한 감정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에너지시대를 생각할 때 국민이 연구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일본은 연료전지, 핵융합 등 정상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태양에너지, 자원의 리사이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어떻든 장기간을 요한다. 스웨덴의 사민당 정권도 탈원전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십년단위로 다음 시대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이다. 몇가지 단계를 생각해 ① 현재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② 어떻게 축소해 갈 것인가, 어떤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 ③ 새로운 에너지시대로 이행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여러가지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 종래 당의 원전정책은 원전사이트에서의 반대운동이 그대로 반원전정책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에너지정책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갈 것 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앞서의 당대회 종료후 정책그룹에 대해 수자의 뒷받침이 있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원자력정책에 대한 견해로서는 기축에너지로 좋으나, 아니나이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적어진 것이 문제다. 국민의 생활방식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관계조합의 사람들로 부터 듣고 있으며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있지 않다. 원자력기본법과 비핵3원칙에 비추어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 그 노력이 부족하다.

大前 대회준비위원장이 말하는 「공통의 場」에 서는 것은 찬성하지만, 더 여론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원자력백서 등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생활방식과 원자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가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